

4월혁명과 지식인 여성

- 반독재와 여권신장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다 -

최 종 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4월혁명의 주체는 오랫동안 지식인 청년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4월혁명에 여중고생, 여성노동자, 성매매 여성, 게다가 할머니들까지 적극 참여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4월혁명의 주체는 남녀 모두의 얼굴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4월혁명의 참여자로 조명되고 있는 여성들은 여중고생 내지는 기층여성들이지 지식인 여성은 아니다. 대표적인 지식인 여성집단인 주류 여성운동세력은 1950년대 동안 여권개선을 위해 나름의 활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독재체제와 결탁함으로써 4월혁명기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정관계에 진출한 일부 여성지도자들의 경우 부정부패에 가담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대시켰다. 독재체제와 결탁하지 않은 여성단체들도 독재정치에 침묵함으로써 독재정치를 제어하지 않았다. 일찍이 이효재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이 시기 여성운동세력은 “결혼과 가정 생활의 민주화”에 기여했는지언정 “사회의 민주화와 연결시켜” 스스로를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류 여성운동에 대항할 대안적 여성운동은 부재했으며 새로운 여성운동 세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 결과 4월혁명 참여자 명단에서 여성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4월혁명은 남성들의 혁명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기층여성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 상징자원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면 지식인 여성은 타도의 대상이었거나 실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으로써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화되던 여성들의 사회참여, 발언권은 4월혁명을 경유하면서 꺾였고 이후 ‘여성은 가정으로!’라는 주장이 세를 얻어나가게 된다.

4월혁명기 지식인 여성들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여권신장이라는 목표와 정치사회 개혁(민주화)이라는 목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해방 없는 정치사회 개혁(민주화)이 공허할 수 있듯 정치사회 개혁(민주화)없는 여성해방이라는 목표 역시 맹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